

Post-Kyoto

포스트교토 배출권시장 전망

글 윤인택 ((주)에코아이 배출권거래센터장)





탄소배출권 시장 및 규모

1992년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킬 목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1997년 협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이 구체화 되면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 메커니즘에서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2)공동이행제(Joint

Implementation, JI), 그리고 CDM과 JI에서 배출되는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3)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 ET)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탄소시장이 형성된 배경이다. 탄소배출권 또는 크레딧(Carbon Credits, 예, AAUs, EUAs, CERs, ERUs, RMUs 등)거래란 기업이나 국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량(Cap)을 부여받고, 국가나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량 이하로 배출했을 경우 탄소배출권의 권리를 판매할 수 있고, 할당받은 배출량 이상으로 배출한 국가나 기업

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초기에 부여받은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과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탄소배출권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다. 세계탄소시장은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온라인거래와 거래 중개인을 통한 장외거래(OTC)시장으로 대별된다. 세계탄소시장의 60~70%는 장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며, 나머지 30~40%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Annex I 국가)이 아니므로 유럽처럼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CDM사업을 통해 발행되는 탄소 크레딧(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의 양이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된 탄소 크레딧을 의무감축국(예를 들면 의무감축국의 기업 또는 중간거래상 등)에 판매하는 형태로 판매자(Seller)의 입장에서 탄소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탄소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세계탄소시장의 규모는 1,263억 달러이며, EU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3%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거래가 기준으로 약 2배, 거래물량 기준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7년 대비 2008년에 Secondary CDM시장의 급성장(450%)과 미국과 호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CCX, RGGI, AAUs등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표 1>

<표 1> 2007~2008년 세계 탄소시장 거래 현황

	2007		2008	
	Volume (MtCO2e)	Value (MUS\$)	Volume (MtCO2e)	Value (MUS\$)
Project-based Transactions				
Primary CDM	552	7,433	389	6,519
JI	41	499	20	294
Voluntary market	43	263	54	397
Sub total	636	8,195	463	7,210
Secondary CDM				
Sub total	240	5,451	1,072	26,277
Allowances Markets				
EU ETS	2,060	49,065	3,093	91,910
New South Wales	25	224	31	183
CCX	23	72	69	309
RGGI	na	na	65	246
AAUs	na	na	18	211
Sub total	2,108	49,361	3,276	92,859
TOTAL	2,984	63,007	4,811	126,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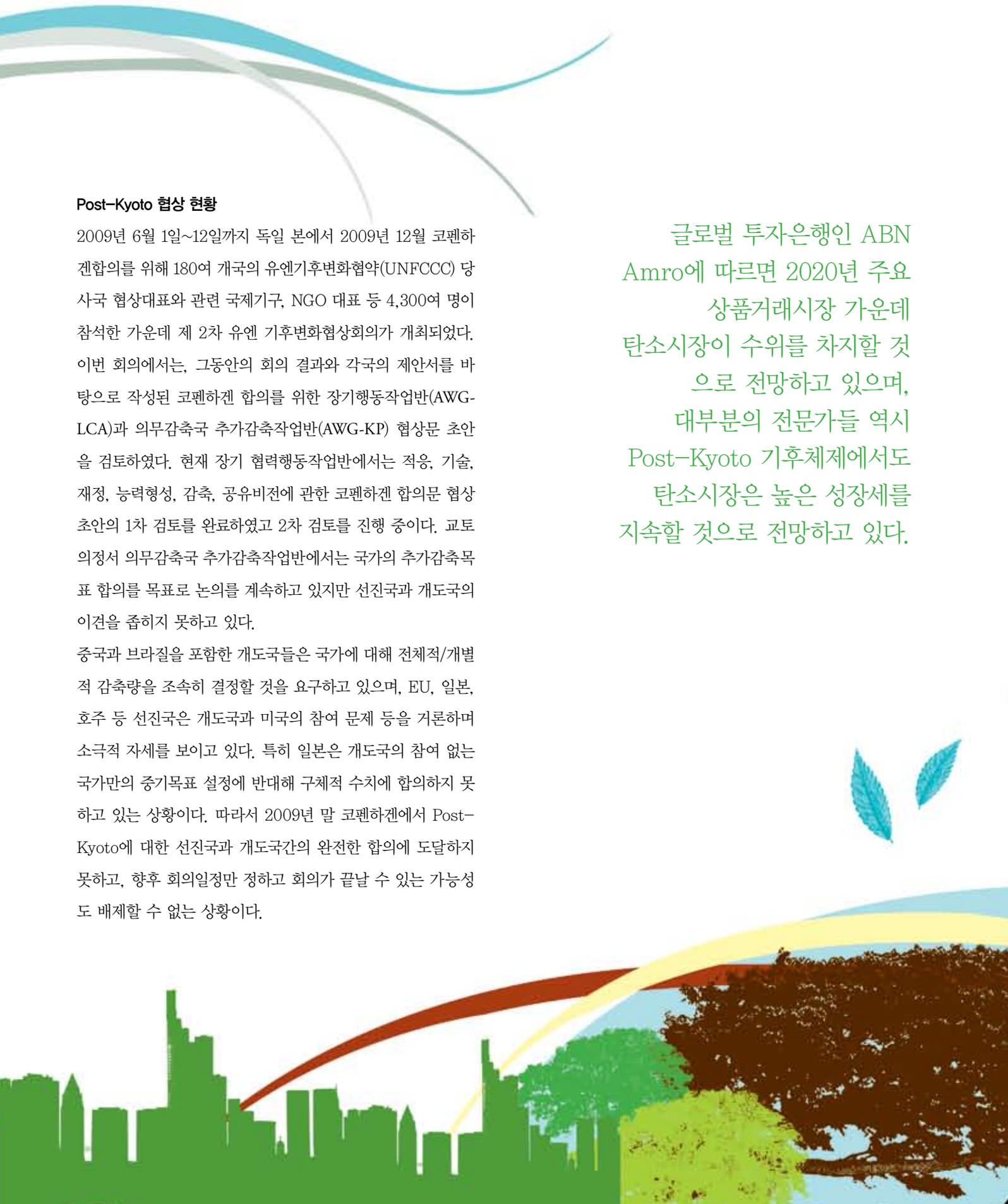


Post-Kyoto 협상 현황

2009년 6월 1일~12일까지 독일 본에서 2009년 12월 코펜하겐합의를 위해 180여 개국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협상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NGO 대표 등 4,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유엔 기후변화협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회의 결과와 각국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코펜하겐 합의를 위한 장기행동작업반(AWG-LCA)과 의무감축국 추가감축작업반(AWG-KP) 협상문 초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장기 협력행동작업반에서는 적응, 기술, 재정, 능력형성, 감축, 공유비전에 관한 코펜하겐 합의문 협상 초안의 1차 검토를 완료하였고 2차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교토 의정서 의무감축국 추가감축작업반에서는 국가의 추가감축 목표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국가에 대해 전체적/개별적 감축량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EU,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개도국과 미국의 참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개도국의 참여 없는 국가만의 중기목표 설정에 반대해 구체적 수치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9년 말 코펜하겐에서 Post-Kyoto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향후 회의일정만 정하고 회의가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ABN Amro에 따르면 2020년 주요 상품거래시장 가운데 탄소시장이 수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 역시 Post-Kyoto 기후체제에서도 탄소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ost-kyoto 탄소시장 전망

탄소배출권 또는 크레딧을 하나의 상품(Commodity)으로 보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은행인 ABN Amro에 따르면 2020년 주요 상품거래시장 가운데 탄소시장이 수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 역시 Post-Kyoto 기후 체제에서도 탄소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 말 코펜하겐회의의 주요 이슈중의 하나는 개도국(우리나라 포함) 참여와 더불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국에 이어 2위인 미국의 참여문제이며, 이는 향후 세계 탄소시장의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의 선거공약, 리버만 법안, 왁스만 법안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각각 14~17%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대비 3.5% 감축되는 수준으로 유럽 국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감축 목표에 비해 매우 작은 양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각각의 제안에 따른 1~2%의 숫자 차이보다는,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

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회에는 교토체제와는 별개의 배출총량거래제(Cap and Trade)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법안이 통과 시 탄소시장,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이 유럽 주도의 컴플라이언스 탄소시장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라도 탄소시장에 참여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국가들 역시 지금까지 많은 자본과 기술을 이산화탄소 감축활동에 지출하였으므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이며, 개도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역규제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경우와 정부가 제한한 국내적으로 적정한 감축행동(NAMAs,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